

#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고용부, 청년구직자 보호 나선다

오늘부터 한 달간 익명신고 접수 6월까지 의심 사업장 현장점검 법 위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모니터링·건설사업장 등 지도점검

- #. A 업체는 정규직으로 채용공고 후, 근로계약 기간을 4개월로 작성하고 이후 계약을 해지했다가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받았다.
- #. B 업체는 급여를 연 3600만원(월 환산 300만원)으로 채용공고 후, 근로계약은 월 267만원으로 체결했다가 과태료 300만원을 내게 됐다.
- #. C 업체는 3조2교대로 채용공고했지만, 결원 직원들의 대체근무에 직원들을 불규칙적으로 지속 배정했다가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처럼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되는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익명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간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



구직자들이 지난달 서울지역의 한 취업박람회장 입장을 위해 늘어서 있다. /뉴시스

도점검으로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해왔다. 그러나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해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채용시즌인 3~4월 중 워크넷 등에 익명신고 웹페이지를 신설해,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및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5~6월) '불공정채용 점검' 시에는 익명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함께,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강요가 의심되

는 건설사업장 등 60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들이 어려운 채용 관문을 통과하고서는 채용광고와 다른 불리한 근로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이 채용광고의 근로조건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면 사전에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법이 남은 국회 임기 중 꼭 통과돼 청년 구직자들이 더욱 두렵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농진청, 스마트팜 신기술 통합 플랫폼 개발

차세대 온실 종합관리 플랫폼 '아라온실' 장비 간 호환문제 해결... 비용 40% ↓

농촌진흥청이 13일 업체마다 다른 스마트팜 장비·재배·운영기술을 하나로 통합해 보급할 수 있는 차세대 온실 종합관리 플랫폼 '아라온실'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그간 우리나라 스마트팜은 개별 제어기와 개별 프로그램을 사용해 호환성이 낮았다. 이런 이유로 통합 관리와 유지보수가 힘들고 새로운 프로그램 보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연구진은 장비 간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유선 방식의 데이터 통신을 유무선 방식으로 확장했다. 또 표준 데이터 코드와 사물인터넷 표준 통신 규칙을 활용해 '스마트팜 장비 통합관리 기술 지침'을 만들었다. 아울러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응용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앱 실행 프로그램과 이를 설치, 갱신할 수 있는 '농업용 앱스토어'를 개발했다.

이번 기술은 개별 장비를 별도 설치해야 했던 지금까지의 스마트팜 구축 방식을, 통합 플랫폼을 통한 일괄 설치

로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장비 간 별도의 호환 조치가 필요했지만, 이 기술을 이용하면 동일 운영체제에서 자동으로 장비의 호환이 가능해 여기에 드는 비용을 약 40% 절감할 수 있다. 또 사후관리도 기기별로 제조사에 개별 요청하지 않고, 통합 플랫폼에서 갱신 과일을 내려받아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농기는 스마트폰에서 앱을 내려받듯 농업용 앱스토어에서 필요한 지능형 관리 프로그램을 찾아 설치 후 사용함으로써 정밀 생육 관리로 생산성과 소득을 높일 수 있다. 기업 역시 앱스토어를 통해 농가에 새로운 응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해진다. 프로그램 품질 향상 등 유지관리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다.

농진청은 개발자 공동체를 운영해, 관련 기업들이 플랫폼을 활용해 상용 제품을 연구할 수 있도록 소스코드와 개발 문서를 공개소스로 제공하며 기술지원에 나서고 있다.

현재 기업 10곳이 상용화 제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들이 개발한 기술은 신기술시범 지원사업으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 중소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최대 3억 지원

근로복지공, 연간 소요 월세 80% 설치비 90%,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직장보육 참여 중소기업 3364개소 달해

정부가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에 더해 시설 임차비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그간 직장어린이집 직접 건립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부담이 줄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장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시설 임차비 지

원'을 신설,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또는 사업주 단체)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면 소요비용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다. 설치비는 소요 비용의 90%(최대 4억원)까지 지원하며,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매월 1인당 138만원)와 운영비(매월 보육 현원에 따라 200~520만원), 시설 개보수비(5년마다 1억원 한도) 등을 지원해, 현재 전국적으로 직장보육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3364개소에 이른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은 대기업보다 재정 부족, 장소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어도 못하는 중소기업의 직장보육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관할 직장보육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 환경부, 밀양강에 새끼연어 30만 마리 방류

일 북해도, 북태평양 거쳐 돌아올 것

환경부가 13일 낙동강 지류인 밀양강에 새끼 연어 3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어 방류는 지난 2022년 2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낙동강 하굿둑이 연중 개방된 이후 연어뿐만 아니라 은어, 재첩, 새섬매자기 등 기수생태계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을 복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노력 중 하나다. 기수생태계란 강 하구 지역에서 바닷물과 강물(민물)이 서로 섞이는 곳을 가리킨다.

이번에 방류된 새끼 연어는 지난해(10~12월 중순) 산란을 위해 북태평양에서 우리나라 동해안의 하천으로 돌아온 어미 연어로부터 알을 받아 부화시킨 후 5개월간 길이 5cm 크기로 키

운 개체다. 연어는 바다에서 살다가 하천으로 올라와 산란하는 대표적인 회유성 어종이다.

환경부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연어는 일본 북해도와 북태평양에서 베링해를 거쳐 3~4년에 걸쳐 자란 이후 어릴 때 살던 하천으로 돌아오는 특성을 가진다"며 "환경적·산업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새끼 연어를 방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류 자동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연어의 회유 경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이번 방류 장소인 밀양강은 낙동강 하굿둑이 개방된 이후 바다에서 강을 거슬러 온 연어가 산란하는 것이 관찰된 곳이다. 이날 행사에는 인근 지역의 환경 전공 대학생 30여 명이 작업에 참여하는 등 기수생태계 복원에 동참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농안법을 알면 유통이 보인다' 개정판 발간

농식품부-aT 제도 내용 현행화... 10년 만에 펴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13일 '농안법을 알면 유통이 보인다' 제2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운영의 기초가 되고 있다.

'농안법을 알면 유통이 보인다'는 농안법을 비롯해 공영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유통관계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체계와 법률 판례·유관해석 등을 엮어 2013년에 최초 발간된 바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인 개정 제2판에서는 주로 ▲농안법의 역사 ▲법률 개정사항 ▲판례·유관해석 등 제도 전반의 내용들을 현행화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 도매시장 혁신의 흐름과 맞물려 10년 만에 새로 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발간사에서 "이 책이 도매시장과 농안법의 역사와 현재, 운영 원칙에 대한 이해를 도와 더



'농안법을 알면 유통이 보인다' 책자 표지 /농식품부

나온 대안을 도출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준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다양한 유통관계자들이 도매시장과 농안법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등 다방면으로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산업부, 항공우주 부품 제조공정기술 지원

총 124억 규모... 6개 기업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 우주항공 부품 생산 공정 혁신과 항공 제조업체의 수출경쟁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총 124억원 규모의 '항공우주 부품공정고도화기술개발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항공우주 부품 제조공정에 로봇, AI(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접목을 중점을 두고 국가전략 기술로 드래프과의 연계성이 높은 민간 여객용 또는 군용 항공기 부품에 적용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6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들은 약 20억원의 정부지원금을 수출연계 초도품 개발과 공정기술 고도화 기술 개발 연구 등에 활용하게 된다.

이번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는 우주항공청이 설립돼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본격화된다"며 "우주항공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첨단부품 기술력 확보에 필요한 제조공정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